

#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재판 연기 요구

민주당, 사법부에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연기 결정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탄핵·입법 등 전방위 대응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민주당이 재판 기일을 늦추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탄핵과 입법 등의 전방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을 주장하고 나서 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두둔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균등한(선거운동) 기회보장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 후보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사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 것이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 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

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탄핵 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이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탄핵·청문회·입법 등 각종 수단 동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윤 총괄본부장은 6일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사법부는)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도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후보의 재판을 연기시키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의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발의됐다. 민주당은 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선무효형의 벌금의 기준을 상향(현행 100만원→1000만원)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MBC 여론조사, 이재명 50%·김문수 29%·이준석 5%

리얼미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중앙일보, 이재명 49%·김문수 33%·이준석 9%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의 독주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5월 첫주 연휴 기간 공개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3자 가상대결’에서 다른 대권 후보를 모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결과,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46.5%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한덕수 후보는 34.3%, 이준석 후보는 5.9%였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진영 타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앞섰다. 이 후보는 보수진영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로 바꿨을 경우 3자 대결에서도 46.6%를 차지, 김문수(27.8%), 이준석(7.5%)를 크게 앞섰다.

광주·전라지역 응답자(137명)의 가상 3자대결 조사에서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8.6%~69.9%로 전국 8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3자 대결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

명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3자 가상대결 결과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50%로, 김문수 후보(29%)와 이준석 후보(5%)를 크게 앞질렀고, 과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대결 구도일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는 5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한덕수 32%, 이준석 6% 순이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후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재명 독주는 여전했다. 보수진영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나설 경우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였다. 한덕수 후보가 나설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는 49%로 한 후보(36%)와 이준석 후보(6%)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응답률 6.4%)됐고,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조사는 통선 3사 후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응답률은 15.4%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후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1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다양한 시나리오

#### 대선 전 확정 판결 불가능하지만 법원 태도 ‘예측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의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가 연일 이례적인 결정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까지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의 확정시점이 언제냐는 것이다. 당장 15일이 후보의 재판 참석 여부부터가 문제다. 이 후보가 첫 재판 기일에 불참하게 되면 바로 다음 기일이 잡히고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불가능하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는 최소 27일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 후보와 검찰은 7일 이

내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죄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이 후보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27일보다 빠른 시일로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대선 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에 기속돼 새로운 증거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